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55.89	↑ 코스닥	708.98
	(+23.17)		(+13.39)
↓ 금리 (미국 9년)	2.408	↓ 환율 (원·달러)	1419.80
	(-0.003)		(-30.10)



삼성·LG전자에 찬밥인 'LCD'... 중국만 배 불렀다

OLED 집중 삼성·LG, LCD 철수 LCD,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최고 닌텐도 신제품 LCD 회귀 사례도 中 3개社, LCD 점유율 66% 차지

프리미엄 TV 시장을 겨냥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남겨진' 액정표시장치(LCD)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그 공백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이유로 고부가가치 전략에 집중하며 수익성이 남아있는 시장을 성급하게 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액정표시장치(LCD)의 점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올해 글로벌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LCD가 807억달러(약 111조4000억원), OLED는 483억달러(약 66조6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OLED는 약 77억4234만달러(약 10조7200억원), LCD는 약 69억2399만달러(약 9조5900억원)로 격차는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고수하며 LCD 사업에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광저우 LCD 생산라인을 중국 TCL 자회사 CSOT에 공식 매각하며 LCD 사업에서 사실상 완전히 손을 뗐다. 삼성디스플레이도 2022년을 끝으로 LCD 생산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양사의 OLED 중심 전략은 제품 라인업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올해 OLED TV 모델을 10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40~80인치 이상까지 다양한 크기를 선보였다. LG전자는 북미·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2025년형 OLED TV를 순차 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 매각을 통해 확보한 2조2000억원을 OLED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LCD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다. OLED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글로벌 TV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제품과 휴대기기에서는 여전히 LCD가 주력이다. 삼성과 LG 역시 전체 TV 판매량의 약 80~90%는 여전히 LCD 기반이다.

실제 역행 사례도 나타났다. 닌텐도는 전작 '스위치'에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했으나, 오는 6월 출시될 '스위치2'에서는 다시 LCD로 회귀했다. 배터리 효율성과 내구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국 국내 업체들이 비운 LCD 수급의 '틈새'를 중국 패널사들이 빠르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4일 베트남 하노이 산업무역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8차 한-베트남 FTA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

채우고 있다. BOE, CSOT(차이나스타), HKC 등 중국 3대 업체는 현재 글로벌 대형 LCD 시장에서 66%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BOE는 지난해에만 대형 LCD 출하량에서 23.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산 LCD 패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CSOT, AUO 등으로부터 7조5825억원어치의 LCD 패널을 구매했다.

지난해 대비 29.3% 증가한 수치다. LG전자도 BOE에서 3조9539억원 상당의 LCD 모듈을 도입하며 지출이 2023년 보다 14% 늘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트럼프 관세'에 뭉치는 아시아 韓-베트남 경제협력 확대 협의

안덕근 장관, 응우옌 베트남 장관과 한-베 산업공동위·FTA공동위 개최 수출기업 비용절감 등 협력방안 논의

정부가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한중일FTA 협상 재개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방문, 응우옌 홍지엔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4차 한-베 산업공동위', '제8차 한-베 FTA공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선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베트남 원전 협력, LNG 발전 협력 및 청정에너지 협력 등과 함께, 유통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재개와 섬유·의류 산업 투자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베FTA 개정, 농축산물 수출입 품목 확대, 양국 수입규제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정부간 2건, 기관간 1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 원전 및 전력망·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대응 협의

와 관련해선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차원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에 46% 고율의 트럼프 관세가 부과된데 따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베트남과의 관세율을 직접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양국 무역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서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을 만나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물론 베트남 정부와도 고위급 회담 및 정부 간 협의회를 통해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일본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FTA 협정 재개에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필리핀과 교역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중일FTA 협력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년 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가능성을 논의했다"며 "한중일 3국이 미국에 대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자제품 관세 혼란에 트럼프 "예외 없다"

"스마트폰 등 다른 형식으로 부과 반도체 관련 구체적 입장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또 '색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3일(현지시간) 전자제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예외 대상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곧 구체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정책을 선화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세계 시장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1일 자국 유력언론 다수는 전자기기·반도체장비 등이 관세 예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이들 매체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공개한 지침을 인용 보도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이달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발표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들 제품은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문제삼아 중국에 매긴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단지 다른 범주의 관세로 옮겨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

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미국)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수지, 비금전적 관세 장벽을 이용한 국가 중 어디도 면죄부 대상일 수 없다"며 "특히 우릴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썼다.

중국산 전자기기에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적용돼 왔다. 향후 반도체와 함께 품목 관세로 전자기기에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관해 14일(현지시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12일 대통령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14일)에 반도체에 대해 답하겠다"며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 대통령 권한대행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 트럼프와 직접 소통 해결 노력"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히틀러의 나라 안 돼, 이재명 심판해야" /사진 뉴스

▲안철수 "이재명, AI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 ... 토론회 제안
▲대선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직전 대비 75억 ↑

▲이준석, 국힘 단일화 선긋고 "TK의원들,尹에 목숨 걸고 직언했다"
▲국힘 "경선서 특정한 웅립 없어...당 화합 해치는 발언 엄중 책임"